

민주당의 대반격 … 국정원·軍 대선 개입 의혹 재점화

댓글·수사배제 총공세 … “朴정부 3공 통치” 비난

“윤석열 같아치우기는 명백한 검찰 장악 의도다”

민주당이 국정감사 와중에서 대형 호재를 만나 여권에 총공세를 펴고 나서고 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해온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특별수사팀장 업무 배제를 불씨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재점화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 이후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은 국군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댓글,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글 게시 등 추가 의혹이 드러난 데 이어 윤 지청장의 석연치 않은 수사 배제 사태까지 발생하자 호재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화력을 집중했다.

김한길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같아치우기는 명백한 수사 외압이고 수사 방해”라면서 “명백한 검찰 장악 의도이고 진실은 폐시도이며,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하려는 수순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대

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국정원의 트위터 글을 통한 대선 개입 의혹도 빼놓지 않고 대여공세의 소재로 삼았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해 대선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댓글작업 의혹과 관련, “지금 드러난 것은 방산의 일각으로, 따로 확보한 내용이 굉장히 많다”며 “민주당이 주가로 확보한 ID와 계시글이 있다”고 말했다.

전병현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수사기관이 사실확인 차원의 조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하기로 한데 대해 “가림막 수사, 덮기 수사가 진행된다면 정치권에서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국정원 심리전 단 직원들이 지난 대선 때 SNS를 통해 5만5000여회에 걸쳐 선거 관련된 글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 “5만5000건의 트위터면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막대하다”며 “리트윗 보면 수백만명이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당, 국정원 등 의혹 커지자 “대선 불복” 불끄기

새누리당은 21일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거세지는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대선 폐배 망령’, ‘대선 불복’ 등을 거론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 개입 의혹이 다시 불붙는 듯한 상황을 경계하며 야당의 공세를 ‘대선 불복 프레임’에 가둬 무력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국정원 대선개

- 김종우



입 의혹을 수사해 온 윤석열 전 서울 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의 업무 배제와 관련한 ‘수사 외압’ 논란이 일고 있는데다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광범위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여론조작 의혹까지 제기되자 경계감 속에 사태 주기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정치적 성향을 떤 댓글을 작성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10·30 재·보선 현장인 ‘경기도 화성갑 당선자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대선이 끝나고 10개월이 되도록 대선 폐배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고질적인 거리 정치를 일삼는 것은 점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꿈을 꾸는 ‘몽매지간’이 아니고 무엇이냐”면서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나”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논란이 잡잡해지기는커녕 계속 확산되는 것 같아 걱정”이라면서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바라보는 곳이 달라…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영

/연합뉴스

윤석열 자신 폭로 “수사 초기부터 외압”

서울중앙지검 국감 … 지검장·지검장 진술 충돌

21일 열린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 및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싸고 지휘 책임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실무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검장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조 지검장과 윤 지검장의 발언은 ‘보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결재·승인이 있었는지’, ‘지휘 체계’, ‘수사 외압 여부’ 등을 놓고 논쟁이 이어졌다. 윤 지검장이 발언하면 조 지검장이 반박하고 다시 윤 지검장이 발언하는 형태로 밤�이 이어졌다.

우선 보고 과정과 관련, 윤 지검장은 “수사 보고서와 향후 계획을 갖고 15일 밤에 검사장 집을 찾아가 보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장 변경 신청은 사안이 중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했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은 4차례 검사장의 재

가를 받았다. 부팀장이 (검사장에게서) 2번 승인을 받았고, 검사장 방에 서도 2번 구두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지검장은 “윤 지검장과 사적인 대화를 했을 뿐 정식 보고가 아니다. 집에서 식사를 한 후 다과를 하다 윤 지검장이 갑자기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에 깊이 검토하자고

돌려보낸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윤 지검장은 다시 밤에 기회를 얻어 “검사장이 ‘야당 도와줄 일이 있느냐’, ‘정 하려면 내가 사표를 내면 해라. 순수성을 의심 받는다’고 말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검사장을 모시고 사건을 더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 지검장은 이와 관련, “검찰은 검사 한 사람의 조직이 아니다. 모든 일

윤석열 지검장

“공소장 변경 신청 보고하자

야당 도와줄 일 있나화내”

조영곤 지검장

“사적 대화…정식보고 아냐

이렇게 항명할 줄 몰랐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검사장이 윤 지검장으로부터 보고와 결재를 못 받았다고 했지만 윤 지검장은 15일 밤에 보고를 했다고 말한다. 보고하고 결재받은 바 없다는 검찰의 기준 발표는 잘못된 브리핑 아니냐”라고 짜증 물었다.

일부 여당 의원은 윤 지검장의 발언 등을 놓고 ‘제2의 검판’, ‘항명’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거세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정갑운 의원은 “이런 검찰을 국민이 어떻게 믿고 지낼 수 있겠나. 조폭보다 못한 행태”라며 “이게 대한민국 검찰 조직이나 시정을 배보다 못한 일이다. 이런 항명이자 하극상”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진실을 밝히려는 게 어떻게 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고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